

민주당 “검찰 셀프개혁 한계 보여줘”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서 수사권 조정 이행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시행에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5만건에서 8000여건으로 80% 이상 대폭 축소가 될 예정임에도 검찰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왼쪽에 쥔 칼로 오른쪽을 자를 수 없

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술집대 검사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어디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들의 수사 및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상적 공권력이 되려면 검찰개혁에 대한 법·제도 개혁이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계기”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직접 수사권 대폭 축소에도 검찰이 수사 인력을 조정하지 않으며 기소권 중심의 조직 운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 사건에서 보듯이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며 “라임 사건의 경우 대검 내부 규정에 따르면 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을 시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은 뒤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반부패부장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에 비직제부서가 지금도 있다. 저희가 비직제 부서 폐지 권고를 냈는데 폐지보다는 비직제부서가 양성화, 직제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의 취지는 비대화된 검찰권 분산인데 현재 검찰권이 얼마나 축소됐느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권의 축소는 뭐니 뭐니 해도 직접 수사 축소인데 이만큼 바뀐지 하는 일은 똑같이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사례를 들면 탈원전 수사는 대전지검 형사 5부인가 6부에서 하는데 그게 이전에는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였다. 이만큼 바뀌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권 관련 지적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온 게 현실이다. 사법통제가 아니라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제 6대 범외 밖에 못하고 제

한된 수사 총량 유지해야 하니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간단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어느 날 제도가 바뀐다고 수사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 전환을 교육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정체성을 심어가면서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하는지 등이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은 “예를 들면 공판검사는 한직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지금까지 수사검사 위주로 검찰청이 작동한 것은 맞지만 현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달라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수사 검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국민 인식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은 도대체 이런 국민 인식을 알고 계시는 것인지도 심히 걱정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위는 향후 검찰개혁과제로 5개 분야를 선정해 역할분담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본래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 숫자가 (수사권 조정 후) 5만건 정도에서 8000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해 후속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꼭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자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김희재 의원, 서민 중산층 전세난 완화 법안 발의

주택건축 민간사업자의 토지·주택 취득세 일부 감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

그러나 과거 폐지됐던 관광숙박 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관광호텔 등은 용적률을 완화해 건설된 경우가 많아, 이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들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2022년까지 10% 감면하도록 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희재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우량임지에 위치한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들이 재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면서 “빠르고 안정된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윤호 기자

김종인-안철수 힘겨루기에 野 후보들 난색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12일 정찰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은 단일화 논쟁에 선거가 매몰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오세훈 전 시장,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 당대당 통합론은 단일화 논쟁에 불을 붙였다.

오 전 시장은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혹은 통합에 자신의 출마 여부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후보들은 선거 국면이 단일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은 ▲이혜훈 전 의원 ▲김선동 전 사무총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종구 전 의원 ▲김근식 경

남대 교수 ▲오신환 전 의원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등 8명이며 나경원 전 의원은 13일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은 야권 진영에 단일화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 경선 과정들이 흐트러진 측면들이 있

다”며 “하지만 단일화되면 무조건 이긴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대표의 출마선언 이후 야권의 후보선출이 갑자기 인지도 높은 기성 정치인의 단일화 살바싸움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정기 전 총영사 등은 지난 11일 모여 “야권후보 단일화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은 안철수의 단일화 대국민 약속을 받아내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우상호·김진애, 서울시장 與 후보 단일화 추진 합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2일 만나 범야권 후보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김의원 사무실에서 회동을 가진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약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우리 두 후보는 민주진보개혁세력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며, 각 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공정하고 아름다운 단일화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다”며 “향후 일정

과 방식에 대해선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어 당과 협의해 함께 논의해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선거인단, TV토론 배심원단, 일반시민 여론조사 등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당시에 준한 단일화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당원참여와 국민참여 경선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야권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실제로 위협적인 것이기에 민주 진보세력의 하나됨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지자 통합의 시너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일화 논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